

아름다운 山河 웅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

## 2020년 적극행정 실행 계획



2020. 3.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요약)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19.8.6제정)」 및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에 따라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추진배경

-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

▶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다 같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어야 함('19.10.28.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지사님)

### □ 주요 추진내용

구분	2019년	2020년
기본방향	적극행정 추진 기반 마련	적극행정 정착 및 도민 체감도 향상
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19.6)</li> <li>•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19.11)</li> <li>•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19.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TF 확대운영 (6개부서→9개부서)</li> <li>• <b>시군 및 지방공기업 협조체계</b>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 추진체계 완비, 지방공기업 협업확산</li> </ul> </li> </ul>
적극행정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19.12)</li> <li>-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4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대상 확대 (<b>소방직</b> 공무원 추가)</li> </ul>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급자부담 완화 위한 전결권 상향</li> <li>• 소송비용 지원조례 제정('19.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청대상확대</b>, 현장상담창구 설치 등</li> </ul> </li> <li>• 소송비용 및 법률자문 지원</li> </ul>
소극행정 혁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19.8)</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극행정 현장 점검(정기→수시)</li> <li>• 소극행정 피해구제제도 마련·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후견인 역할강화, 권리구제절차 고지 등</li> </ul> </li> </ul>
분위기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직원 특강 및 실천다짐 결의대회('19.10)</li> <li>• 대표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시군 포함)</li> <li>• 전직원 특강 및 찾아가는 사례교육 추진</li> <li>• 카드뉴스 및 사례집 자체 제작·배포</li> </ul>
도민체감 도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li> <li>• 적극행정 <b>도전과제</b> 추진(실국별 1건)</li> </ul>

### □ 금후계획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이행 및 실적관리(4월~)

# 목 차

I . 2020년 기본방향 .....	1
1. 적극행정 추진방향 .....	1
2. 적극행정 비전 및 전략 .....	2
II . 2019년도 주요성과 .....	3
1.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3
2.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4
3.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 .....	5
4.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 추진 .....	5
III .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	7
1.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	7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11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14
4. 소극행정 혁파 .....	18
5.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 확산 .....	20
6. 도민체감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추진 .....	23
IV . 추진일정 및 금후 계획 .....	24
1. 과제별 추진일정 .....	24
2. 추진상황 점검·관리 .....	26
3. 금후계획 .....	26
[붙임1]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소관부서별 업무분장 현황 .....	27
[붙임2] 시군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현황 .....	28
[붙임3]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서식 .....	29
[참고자료] 적극행정·소극행정 개념, 관계법령 등 .....	30

# I . 2020년 기본방향

## 1 적극행정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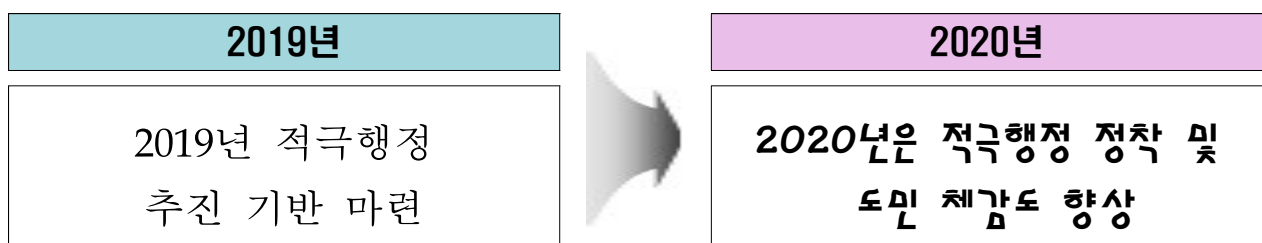
### □ 추진배경

- 행정환경의 급변화로 법·제도와 현장간의 괴리가 심화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한 공직자의 적극적인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19. 8.)에 따라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추진
- 적극행정의 일관된 추진·관리로 공직자의 지속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 ▶ 적극행정이 정부 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함. 각 부처 장관들께서 장관 책임 하에 적극 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기 바람. ('19.2.12. 국무회의, 대통령)
- ▶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가 더 중요 ('19. 7. 30. 국무회의, 총리)
- ▶ 현행법으로 안 되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임. 적극행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만족하고 다 같이 행복한 전라북도가 되어야 함('19.10.28.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지사님)

### □ 추진방향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제정)에 따른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강화
  - \* 관련제도 보완을 위한 자치법규 제·개정, 시군 추진체계 완비 등
- 시군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소통·협력으로 적극행정 확산 추진
- 도민 불편규제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적극행정 추진 지원
-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동변화 유도



## 2

## 적극행정 비전 및 전략

## 비전

도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으로 행복전북 실현

## 전략

- ◆ 적극행정 지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바침
- ◆ 소극행정 엄정제재를 통한 소극행태 개선·예방
- ◆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현장소통으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6대 추진방안

## 14개 핵심과제

1.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 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② 적극행정 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및 자발적 행동변화 유도
- ③ 적극행정 창구 운영을 통한 도민체감도 제고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①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 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상 우대(대상 확대)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①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 ②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강화
- ③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④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강화

4. 소극행정  
혁파

- ①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조치
- ② 소극행정 피해 구제제도 마련·운영

5. 규제애로해소  
및 사례 확산

- 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 ②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채널 다양화

6. 적극행정  
도전과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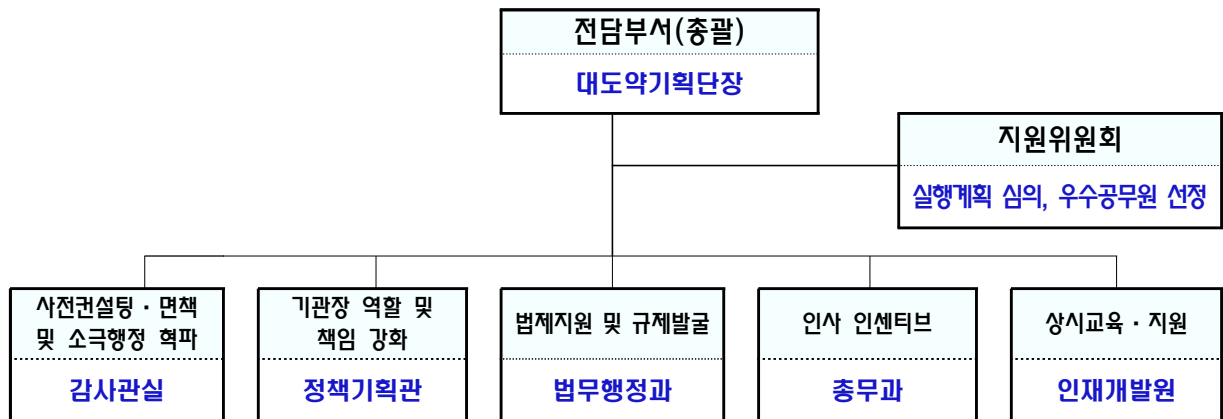
- ① 도민 체감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추진(전 실국 적극행정 실천)

## Ⅱ. 2019년도 주요성과

### 1 적극행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추진체계 구축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19.6.28, 대도약기획단)
- 전담 지원부서 팀장급이 참여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TF」 구성·운영('19.9월~)



- 전라북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19.7.31., 3대 추진방향\* 17개 과제)
  - \* 기관장 역할·책임강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전라북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19.11.19., 13명) 및 제1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19.12.1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 □ 적극행정 관련 조례 및 규정 제·개정

-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19.11.11, 대도약기획단)
  - \* 적극행정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전라북도 공무원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19.11.11, 법무행정과)
-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19.8.9.감사관)
  -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고의·중과실 배제요건 완화), 현장 면책제도 운영근거 마련, 면책심사 신청기한 완화(감사 종료 후 30일까지 → 처분 요구 전)
-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19.10.18, 정책기획관)
  - \* 하급자 부담완화를 통한 적극행정 촉진을 위해 전결권 상향(15건)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인사 상 우대)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19.12.10.)
  - 사례접수 36건, 실무심사 및 지원위원회 심의결과 최종4명 선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19.12.19.)
  - 인사우대심의회 심의를 통해 해당 인센티브\* 결정
    - \* 특별 승급 및 근평 가점(1점) 1명, 근평 가점(1점) 및 특별휴가3일 3명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한 사례발굴 및 선정('19.6.27.)
  - 사례접수 20건, 전문가 및 현장평가단 심사결과 3건 선정 및 시상\*
    - \* 최우수 1건(상장, 50만원상당 온누리상품권), 우수2건(30만원상당 온누리상품권)

### '19 우수공무원 선정 사례 1 자발적 전복내수면 발전전략 수립

20여개의 관련연구보고서 및 수백건의 보도자료 집중분석, 공무원 자체연구용역 수행과 전복내수면 발전전략(5대 추진전략 7대세부과제)을 수립

☞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시설 건립'사업이 해수부 공모에 최종선정 되는 등 5개사업 정책화

### '19 우수공무원 선정 사례 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방세 감면으로 투자활성화

현대중공업군산조선소 가동중단,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군산지역 지방세 지원방안 마련 및 행안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건의(감면신설)

☞ 관련법 및 도세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세감면으로 전북군산형일자리 상생협약 토대 마련

## □ 사전컨설팅감사 및 면책을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지속적인 제도 홍보, 현장창구운영 등을 통해 활성화 노력
  - 사전컨설팅감사 61건, 적극행정 면책 5건 인용(신청 9건)
  - 시·군 사전컨설팅감사 현장창구 운영 8회(상담11건), 제도홍보 9회

### '19 사전컨설팅 사례 자율주행 자동차 구매 수의계약 체결 가능여부

○○관광벨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자동차(버스4대) 구매와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가능여부  
☞ 자율주행자동차를 생산·소지하고 있는 자가 1인(업체)뿐인 경우로 다른 물품을 제조·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

### '19 적극행정 면책사례 감리원 필요자격 미달인 자의 방제사업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해 총43건 설계감리용역을 동일한 기술자가 동시 수행, 11건이 법에서 정한 감리원 필요자격에 미달(설계자격은 충족)

☞ 당초 설계감리용역 발주시에는 100ha이하로 기술1급이하 감리원이 가능했으나 정밀조사후 물량이 급증하여 100ha초과, 예산부족상황에서 10월말~3월말까지 기간내 방제수행 및 피해고사목 최소화를 위한 공익목적행위로 사적 이해관계 없음이 인정되어 신분상 처분 면책

### 3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

#### □ 소극행정 엄정조치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로 적극행정 지원 및 국민 만족도 제고
  - 감사관실내 사무공간과 분리된 '민원상담방' 설치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내실 있는 민원 신고 접수
  -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19.8월) 및 도 대표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하기" 메뉴 개설(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연계)
- 2019년 소극행정 등 국민 고충민원처리 : 218건
  - \* 「도로법」 위반자 행정처분 미이행 등 소극행정 행위자 3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중징계2, 경징계 4, 훈계 27)

#### □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소극행정 근절을 위한 「민원분야 조사 및 대응 기본방침」 통보('19. 11. 12.)

##### (기본방향)

- ① 소극행정 관련 민원에 대한 공직감찰 기능 강화(정기→수시)
- ② 소극행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자 신분상 문책 강화
- ③ 감사(조사) 지적사항 등 정기적 공개 등 사후관리 강화(반기별)

(유 형) ① 적당편의, ② 업무해태, ③ 탁상행정, ④ 관중심행정

(성립요건) ① 소극적 행태, ② 부당성, ③ 부정적 결과

⇒ 소극행정으로 인한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 조치 및 출자·출연기관, 사무위임·위탁기관에 전파 협조

### 4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Boom Up) 추진

#### □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및 공감 제고

- 인재개발원 사이버 교육과정 신설('19.8월~, 3개과정)
  - \*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적극행정
-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대회 및 명사(이국종 교수) 특강('19.10.28)



- 적극행정 사례교육 및 시군 성과공유 간담회('19.11.19)
- 적극행정 확산 시군 순회 교육('19.11.~12월, 4개 시군)

## □ 다양한 홍보 활동 추진

- 행정포털\* 및 대표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개설('19.8월~)
  - \* 제도소개, 우수사례, 카드뉴스·웹툰·영상, 알림 및 소식
  - \*\* 제도소개, 교육 및 우수사례, 우수공무원 도민추천, 소극행정 신고하기
- 전광판 홍보 동영상 및 행정전화 통화연결음 송출('19.9~12월)
-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 이벤트 개최('19.9월, 152명 참여)
  - ※ 전북의 적극행정 선도적 추진으로 '중앙·지방 적극행정 추진전략 성과 공유대회' (10.10, 중앙부처 합동)에서 지자체 대표로 발표

## □ 적극행정 사례발굴 및 현장체감 규제혁신

- 적극·협업행정 자체 경진대회 개최('19.6.27.)
  - 사례 발굴(42건),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6명)
- 인사혁신처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19.11.7)
  -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방세 법령 개정 및 도세감면 조례 개정
- 2019 지방규제혁신 유공 정부포상 수상
  - '규제혁신과제 선정·개선 분야' 최우수 기관표창(전라북도)
  - 규제혁신 사례 발굴(34건), 행안부 사례인정(16건), 우수사례선정(4건\* / 전국 20건)
    - \* 장기임대용지 임대요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등
- 규제입증책임제 본격 도입을 위한 조례·규칙 전부개정('19.11.11)
  - 규제개혁위원회 확대(15명→29명) 및 4개 분과위 구성·운영
-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위한 “유연한 입법방식” 적용·개선으로 지역산업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기반마련
  - 도·시군<sup>사례발굴</sup>→중앙부처<sup>검토</sup> 및 대안제시 협업을 통한 전환과제 발굴(6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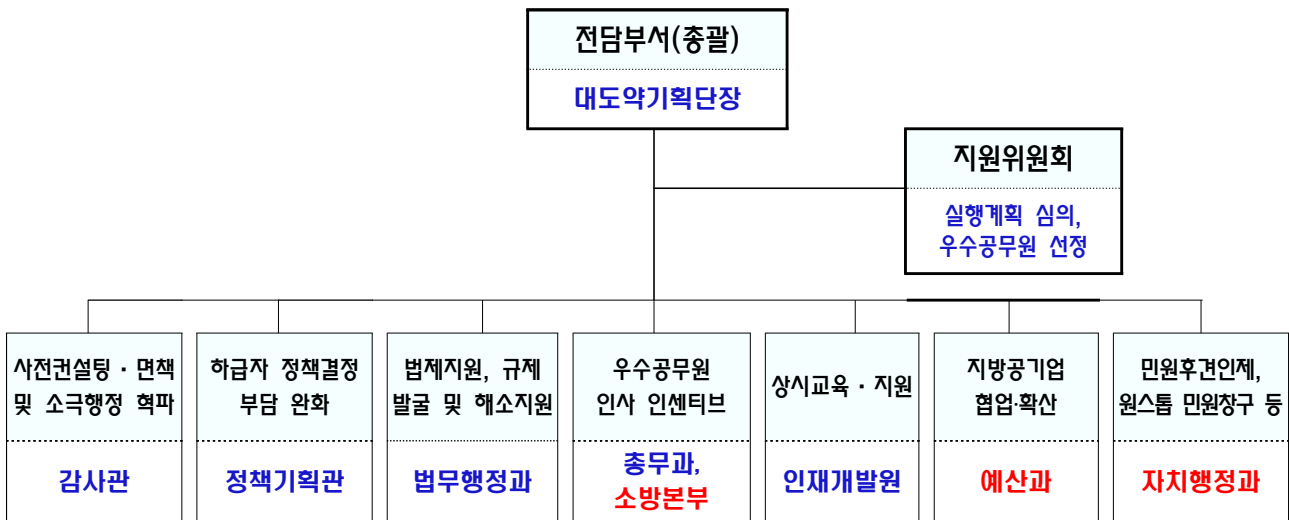
# Ⅲ.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 1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

### 1-1.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TF 확대 운영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적극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담 및 지원부서간 협조체계 강화 및 '20년 추진방향에 맞춰 확대 구성·운영 ※('19) 6개 → ('20) 9개부서
  - (기존) 대도약기획단<sup>전담</sup>, 감사관, 법무행정과, 총무과, 인재개발원, 정책기획관
  - (확대) 예산과<sup>지방공기업 협업·확산</sup>, 자치행정과<sup>민원후견인제 등</sup>, 소방본부<sup>소방공무원 인사 상 우대</sup>
- 적극행정 협력체계(안)



※ 전담·지원 부서별 주요역할(붙임1)

#### □ 시군 및 지방공기업 협조체계 강화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예산과)

- 시군 적극행정 추진체계 완비
  - 적극행정 지원조례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완료('20.상반기)

※ 시군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현황 ('20. 3. 10. 기준 / 붙임2)

- 조례 제정 : 완료 14      ● 위원회 : 완료 5, 대체 4, 진행 5

- 소통 및 협력강화를 위한 **책임관회의 정례화**
  - (시기) **반기 1회 이상** 적극행정 책임관회의 개최
  - (대상) 14개 시군 및 **지방공기업**(전북개발공사)
  - (내용) 적극행정 추진기반 마련 및 분위기확산 협력방안 논의 등
- 도 자체 경진대회 참여 확대 및 표창 추진
  - (시기) '20. 6월 경진대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 (대상) 도 전부서, 시군, 전북개발공사 \* ('19) 도 본청 한정
  - (내용) 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②민원 또는 갈등 해결 ③공공 서비스 질 향상 ④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⑤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추진

## □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및 적극행정 확산 (소관부서 : 예산과)

-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시기) '20. 3월
  - (대상) 3개 기관 \*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 (주요내용)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직원교육 및 붙임 조성 등
- 불합리한 규제\* 발굴·정비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
  - \* (전북개발공사) 도민생활과 밀접한 임대주택 분야 민원해결, 규제혁신 등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제11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적극행정지원위원회)
- (구성) **총 13명**(위원의 2분의1이상은 민간위원)
  - 민간위원: 8명 \*감사1, 성과평가1, 인사2, 규제1, 지방자치1, 지방재정1, 정부혁신1
  - 당 연 직: 5명 \*행정부지사(위원장), 감사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자치행정국장
  - ※ 간사 : 적극행정 책임관(대도약기획단장)
- (운영) 법정위원회로서 정기회의(반기) 및 수시회의(필요시)
  - ※ 제1기 위원 위촉기간 : 3년('19. 12. 10. ~ '22. 12. 9. / 1회 연임가능)
- (역할·기능)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인허가 관련 업무방향 의견제시 및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 사항 등

## 1-2. 적극행정 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및 자발적 행동변화 유도

###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소관부서 :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 (기본과정) 적극행정 관련 교과목 편성운영
  - ('20년) 2개 과정 9기 880명(핵심리더 1기 80, 신규임용자 8기 800)
  - \* ('19년) 2개 과정 6기 671명(핵심리더 1기 69, 신규임용자 5기 602)
  - 주요내용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행정 이해 등
  - 편성시간 : 교육과정 기수별 2~3시간 편성
- (맞춤형과정) 적극행정 교육과정 운영
  - 소송수행자 역량강화 150, 및 규제혁신 역량강화 80 과정 운영
  - 주요내용 : 행정소송실무, 행정제이해및과제, 규제개혁마인드학교, 규제개혁평가등
- (사이버과정) 적극행정 관련 교과목 연중 운영 및 과정확대
  - 나라배움터 교과목\* 공동활용하여 도 사이버교육과정에 적용
  -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실천 필요성 교육 등
- (교육홍보·활성화계획) 적극행정 제도 안내 및 사이버 과정 홍보
  - 모든 교육운영과정 안내책자에 수록 적극 행정제도 홍보 등

### □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 실시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교육시기) '20. 5월, 9월
- (교육대상) 전 직원 대상
- (교육방법) 학이시습의 날 등 직원 집합교육 실시
- (교육내용) 적극행정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사례 소개 및 인사 상 우대,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안내, 소극행정 유형·사례 및 징계기준 등

### □ 분야별 심화 전문교육 및 인식개선 추진 (소관부서 : 법무행정과)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상·하반기 연 2회)
  - 2020년 법제처 순회 법제교육 시 교육과목 포함 추진
  - 일시/장소 : 20. 5. 28 ~ 5. 29. 전라북도립미술관 대강당 \* 하반기는 9월 예정
  - 대 상 : 도 및 시군공무원, 도의회 공무원
  - 교육내용 : 적극행정 및 적극행정 법제 개념, 필요성, 법제 실현방안 등

### 1-3. 적극행정 창구운영을 통한 도민체감도 제고(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원스톱 민원 창구 운영

##### ○ (주요내용)

-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모든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 원스톱 민원창구-민원후견인제 비상연락망 구축
- 부서별 민원사무업무 편람 재정비
- 자원봉사자 활용 민원후견인 안내

##### ○ (추진일정)

- '20년 원스톱 민원창구 운영 계획수립('20.3월) → 민원사무업무 편람 재정비('20.3월) → 민원후견인 비상연락망 구축('20.3월) → 자원봉사자 안내교육('20.3월) → 도민만족도 조사('20.6월, 11월)

#### □ 민원후견인제 역할·체계 강화

##### ○ (주요내용)

- 민원후견인 지정 : 15명 / 본청 실국 주무팀장으로 구성
- 민원후견인 지정자에 대한 역할 강조
- 반기별 1회 이상 민원후견인 지정자 및 역할 안내 공문발송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지정자의 역할 인계인수 누락 방지
- 연가·출장으로 인한 민원후견인 부재시 대리자를 반드시 지정

##### ○ (추진일정)

- '20년 민원후견인 운영계획('20.3월) → 민원후견인별 역할안내 공문발송('20.3월) → 민원후견인 비상연락망 구축('20.3월) → 도민만족도 조사('20.6월, 11월)

## 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2-1.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 선정 개요

- (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시기) '20. 6월, 12월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정
- (규모) 반기별 3명 내외 \* 별도계획 수립 및 위원회 결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 (대상) ①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②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③기타 적극적인 업무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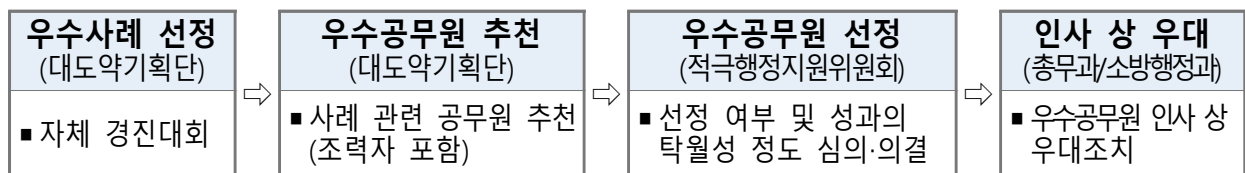
#### □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②민원 또는 갈등 해결 ③공공서비스 질 향상 ④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⑤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i)심사항목 : 도민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담당자의 적극성, 담당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확산가능성 ii)단순히 실적과 능력이 뛰어난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적극행정 사례'를 중심으로 선발하여 우수사례 공유·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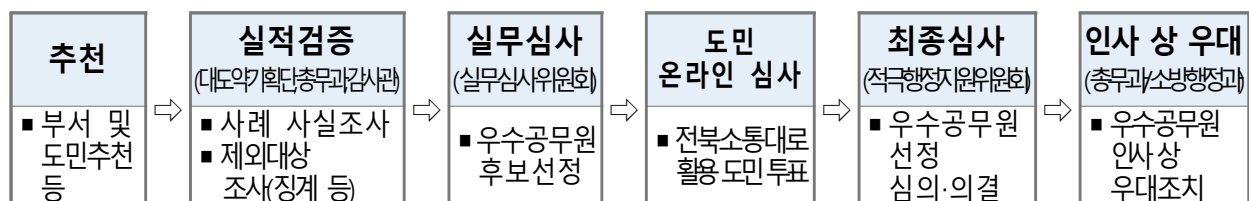
#### ○ (추진절차)

- 상반기 :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연계 추진



※ 경진대회 서면심사 및 본심사 위원으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민간위원 참여

- 하반기 : 부서 및 도민추천 후보자에 대한 심사 및 선정



## 2-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상 우대

### □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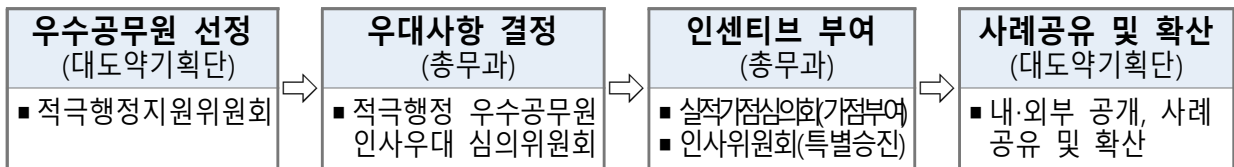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 상 우대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성과의 탁월성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희망고려
- 성과에 대해 보상 시기를 최대한 단축 시행

### 일반직 공무원

(소관부서 : 총무과)

### □ 우대사항 결정 및 부여 개요

- (대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자
- (기준) 성과의 탁월성 정도 및 대상자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추진절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심의위원회에서 우대종류 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심의위원회

- 구성 : (위원장) 행정부지사, (위원) 실국장 5인 이상
- 운영 : 위원의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이상 찬성으로 결정

### □ 인사 상 우대 종류

구 분	주요내용
① 특별승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야 하나 1년 단축이 가능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관계없이 4급 이하 공무원의 1계급 승진임용 *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②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 이하)의 호봉을 1단계 승급
③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성과상여금(6급 상당 이하) 또는 성과연봉(5급 상당 이상) S등급 부여
④ 특별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 포상휴가 부여
⑤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도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1년 단축
⑥ 근무성적평정 시 실적가점 부여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1.0점 부여
⑦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이를 단축하여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 단축가능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⑧ 희망부서로의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중)
⑨ 교육훈련 우선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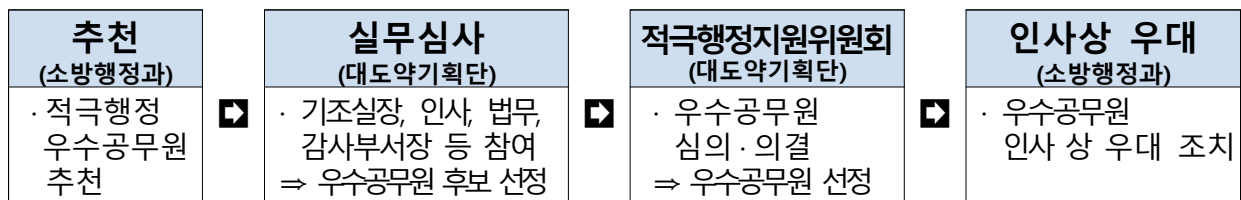
## □ 인사 상 우대를 위한 추진과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심의위원회 정례화(연 2회)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 추진('20.상반기) \* 5일 이내의 포상휴가 신설

## 소방직 공무원 (소관부서 :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 우대사항 결정 및 부여 개요

- (대상) 반기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 (부여원칙) 성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우대종류 하나 이상 반드시 부여
- (추진절차)



※ 인사상 우대사항 결정 시 자체 위원회 개최하여 우대사항 결정

## □ 인사 상 우대 종류

구 분	주요내용
① 특별승진임용	소방장 이하 소방공무원의 1계급 특별승진임용
② 특별승급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해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에 대해 1호봉 특별승급
③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성과상여금(소방경 이하) 또는 성과연봉(소방령 이상) 최고등급 부여
④ 특별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
⑤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대우공무원 선발기간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⑥ 가점 부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시 가점 0.3점 부여
⑦ 근속승진기간 단축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 1년 단축 * 단축가능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를 초과할 수 없음
⑧ 희망부서로의 전보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원하는 희망부서로 전보(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중)
⑨ 교육훈련 우선 선발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 선발

※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근거



## 3-1.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소관부서 : 정책기획관)

## □ 현황 및 추진근거

- (추진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한다.

- (사무전결 사무현황) 8,648건 \* 본청 6,707 직속기관 986, 사업소 955

구 분	계		담	당	관·과장	실·국장 (본부장)	부지사	도지사
			실무자	팀장				
사무전결	사무(건)	8,648	22	752	5,749	1,725	339	61
	비율(%)	100	0.3	8.7	66.4	20	3.9	0.7

## □ 주요내용

- (추진방향) 자치단체장(또는 간부공무원)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명확히 하여,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과 책임 완화
- (추진방법) 조직개편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 관련지침과 부서별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추진(20.하반기)

-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안은 위임전결을 제한하여 단체장이 직접 결정하도록 규정**
-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고려하여 검토 및 결정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안은 적극적으로 위임전결**하되, 중대한 민원 발생 및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때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을 명시

- (추진절차) 사무전결 규칙 개정 의견수렴(소관부서) → 결정권한 위임(전결)의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가중 여부 검토 및 보완 → 전결권 조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이후 추진

### 3-2.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컨설팅제도 강화(소관부서 : 감사관)

#### □ 사전컨설팅감사 운영현황

- (추진근거) 「전라북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2017.3.24.제정)
- (감사대상)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등
- (운영현황) 사전 컨설팅감사 대상기관 지속적 확대('20년 71개기관)
  - \* 신청대상: ('17) 40개 → ('18) 55개 → ('19) 70개 → ('20) 71개
  - \*\* 운영실적: ('17) 70건 → ('18) 49건 → ('19) 61건 → ('20년목표) 63건

####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대상자 확대 운영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기존 공무원에서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기업)까지 확대하여 적극행정 문화 확산 도모
  -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20. 상반기)
-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감사장에 설치·운영
  - 감사 걱정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기간 중 “사전 컨설팅감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자문·권고 등 해법 제시
-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 및 사례전파
  - 도 홈페이지, 공문 등 On-off 라인의 지속적인 홍보 실시
  - \* 사전 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추후 감사면제 안내

### 3-3.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소관부서 : 감사관)

#### □ 적극행정 면책 운영현황

- (추진근거)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2009.3.6.제정/2019.8.9.개정)
- (운영현황)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 \* ('15) 1건 → ('16~'18) 신청없음 → ('19) 9건 → ('20년목표) 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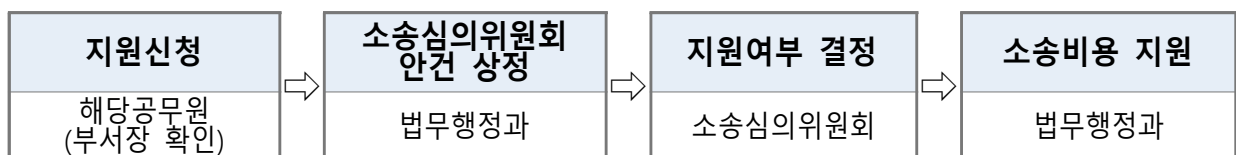
## □ 활성화 계획

- 고충민원에 대해 권익위의 시정권고·의견표명에 따라 조치한 경우 자체 감사 시 면책
  - 권익위 시정권고·의견표명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
  - \* ①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②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20. 4월중)
-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담창구 감사장에 상설·운영
  - 감사기간 중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즉시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기간 단축으로 해당 공무원의 불안감 해소
- 감사계획을 통보하거나 확인서 징구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문구를 삽입하여 면책신청 안내 등 적극홍보 추진

## 3-4. 적극행정 공무원 법률적 지원 강화

### □ 소송 비용 지원 (소관부서 : 법무행정과)

- (추진근거)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19.11.11. 제정) 및 시행규칙('19.12.13. 제정)
- (지원목적) 전라북도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및 공무수행 안정성 확보
- (지원대상)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
- (지원절차)



\*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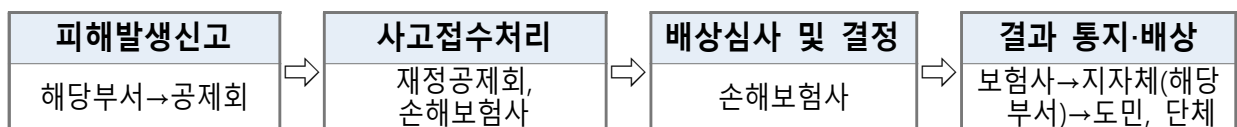
- (지급기준)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 민사소송 : 신청사건(100만원 이내), 본안사건(소가에 따라 200~700만원 이내)
    - \* 기타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비용 지급기준 준용
  - 형사소송 : 개인 단독사건(300만원 이내), 다수 관련사건(500만원 이내), 도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건(700만원 이내)

#### □ 법률전문가 등 조력 지원 (소관부서 : 법무행정과)

- (지원근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적극행정을 수행한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 (주요내용)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및 희망법률상담실 법률상담관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신분상 권익 보호
  - \*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각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명 지원

#### □ 배상책임 지원 (소관부서 : 총무과)

- (지원대상)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
- (주요내용) 직무수행 안정성 보장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전 직원 책임보험(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 보상내용 : 법률상 손해배상금, 변호사 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등
- (지원절차)



※ 사고발생 시 배상결정 및 보험금 지급 처리절차 흐름도(참고6)

#### □ 법령유권해석 사례 제공 및 홍보 (소관부서 : 법무행정과)

- (배경) 인·허가 민원처리 시 법령해석 오류 및 불합리한 행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유권해석 사례 코너를 도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상시 법령해석사례 제공 및 이에 대한 적극 홍보
- (시기) '20. 3월 중 개설
- (내용) 행정안전부 법령 유권해석 DB와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DB를 도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상시코너 개설 제공
- (홍보) 홈페이지 안내 및 전광판 홍보 등

## 4 소극행정 혁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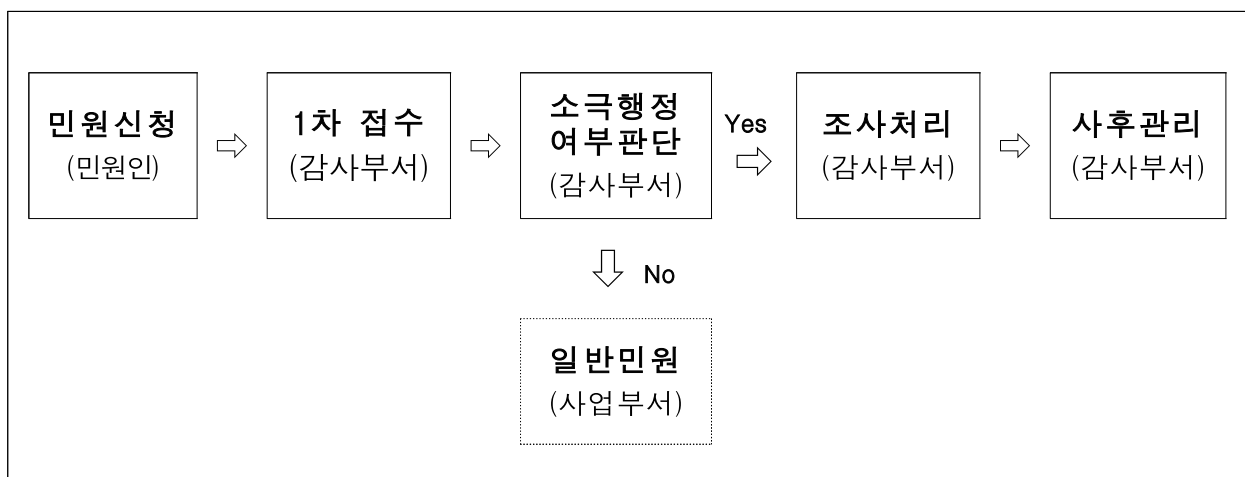
### 4-1.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조치 (소관부서 : 감사관)

#### □ 소극행정 현장 점검

- 소극행정 민원분야 조사 및 감찰 기능 강화
  - 소극행정 관련 민원에 대한 공직감찰 기능 강화(정기→수시)
  - 감사(조사) 지적사항 등 정기적 공개 등 사후관리 강화(반기별)
  - 소극행정 관련 지적사항에 대한 관련자 신분상 문책 강화

#### □ 온·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 소극행정, 위법·부당한 행정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속한 민원해결로 적극행정 지원
  - 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19.8월) 및 도 대표홈페이지 “소극행정 신고하기” 메뉴 운영(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연계)
- 소극행정 처리 절차



#### □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 감사(조사) 지적사항 등 정기적 공개 등 사후관리 강화(반기별)

## 4-2. 소극행정 피해 구제제도 마련운영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 행정서비스 현장 개정

#### ○ (주요내용)

- 최근 동향과 지역 여건 및 정서를 고려한 행정서비스 현장 개정

#### ○ (추진일정)

- 도민 의견 수렴 및 타시도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규정 분석(~'20.3월)  
→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규정 개정안 초안 작성('20.5월) → 전문가  
상담 등 의견수렴('20.5월) → 행정서비스현장 운영규정개정 완료('20.7월)

### □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 ○ (주요내용) 인허가 등 거부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통보

- 불허가 사유를 상세히 적시, 친절하고 성의있는 답변 시행
  - \* ① 법적근거(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 내용), ②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③ 권리구제절차 등을 상세하게 적시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를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 (추진일정)

-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고,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고지하도록 부서 안내(연중)

####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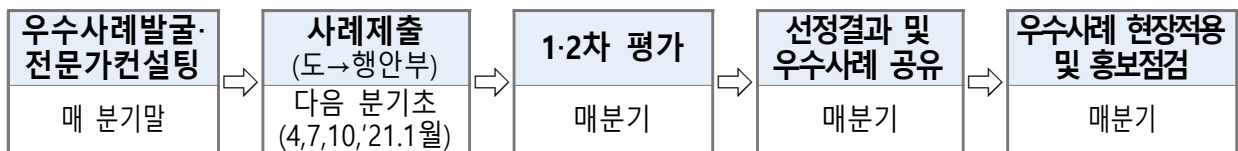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서식(참고7)

## 5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및 우수사례 확산

### 5-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소관부서 : 법무행정과)

####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 (기본방향) 도 및 시군의 적극행정으로 주민·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를 발굴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공유·확산
- (선정목표) 9건 \*('19) 선정 16건(목표8건), 우수사례 4건 / 사례발굴34건
- (발굴대상) '18~'20년 3년간의 적극행정을 통해 '20년에 실제 기업·주민의 규제애로를 개선(고용창출·지역경제활성화·생활불편 해소)한 사례
- (추진절차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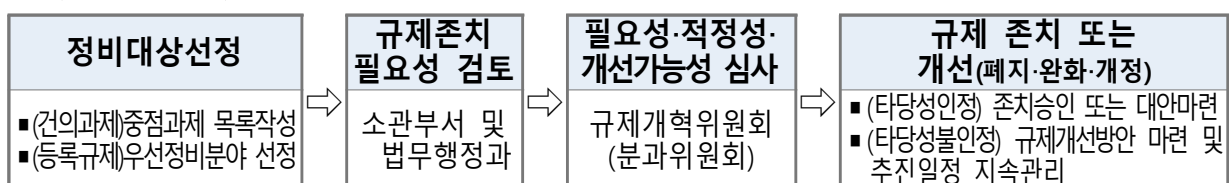


- (실적관리 및 사례홍보)
  - 실적 점검 및 통보(매 분기), 부진 시군 사례발굴 컨설팅(수시)
  -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결과 및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공유

#### □ 「규제입증책임제」 적극 활용하여 적극행정 걸림돌 개선

【규제입증책임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하여 도민·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소관부서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방식

- (기본방향) 규제입증책임제를 자치법규에도 적용하여 기존규제를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를 타파하고 적극행정 확산 및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 (추진대상) 주민·기업으로부터 규제개선 건의과제,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행정규칙 등록규제
- (정비방법)



※ 규제개혁위원회 확대(15명→29명) 및 4개 분과위 구성 완료('19.11월)

## 5-2.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채널 다양화

###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목 적)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인식제고 및 문화 확산
- (개최시기) 2020. 6월
- (참여대상) 도 전부서, 시·군, 전북개발공사
- (선정규모) 7건 정도 ※ (도) 최우수 1, 우수 2, (시군 등) 최우수 1, 우수 3
- (추진절차)

예선		본선
<b>우수사례 발굴·추천 (4월말~5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실국원별 2건이상 추천</li> <li>■ (시군, 전개공) 자체 심사·추천</li> </ul>	⇒	<b>서면심사 (5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단* 구성 및 서면평가 * 팀장급, 외부전문가</li> <li>■ 전북소통대로 활용 도민온라인심사</li> </ul>
	⇒	<b>경진대회 (6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가, 공무원, 도민 등 현장평가단 심사</li> </ul>

- (사례발굴분야) ①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②민원 또는 갈등 해결 ③공공서비스 질 향상 ④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⑤행정효율 향상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 ※ 단기 실적(성과) 위주가 아닌 **도민의 관점에서 적극·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
- (우수사례활용) '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과 연계, 선정된 우수사례로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홍보

### □ 적극행정 홍보채널 다양화 및 적극 홍보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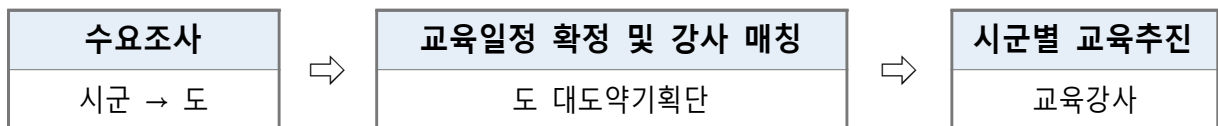
-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 운영으로 인식개선 및 공감형성
  - 적극행정 우수사례, 카드뉴스, 웹툰, 관련 소식 등 업데이트
- 도 대표홈페이지, 전북소통대로 적극행정 코너 활성화
  - 도민들에게 적극행정 관련 제도 안내 및 모범 사례 전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창구로 활용



- 적극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 규제혁신, 사전컨설팅 및 면책 등 분야별 우수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 및 이벤트 추진
  -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전 직원 관심 제고 및 참여 확산
  - 행정전화 통화 연결음(적극송),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등
- 적극행정 우수사례 자체 카드뉴스 등 콘텐츠 제작·홍보 등

## □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추진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목적)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시군교육 지원
- (대상) 12개 시군 ※ 14개 시군 중 12개 시군 신청
- (시기) 2020. 4월 ~ 계속 ※시군별 맞춤일정
- (추진절차)



※ '20.1.2~1.10 교육수요조사 실시 / '20.1.15 일정확정 시군 통보

- (주요내용) 적극행정의 개념 및 필요성, 유형·사례 소개, 사전컨설팅 및 면책제도 안내, 소극행정 유형·사례 및 징계기준 등
- (강사활용)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표준강의 강사풀 활용·연계지원

소관업무별 구체적인 “적극행정 실천다짐 결의(“19.10.28)” 이행을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적극행정 추진

## □ 발굴 개요

- (목 적) 실국별 도전과제를 발굴 및 목표설정하고,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포함 추진함으로써 도민체감도 제고
  - \* (추진과제) 실무TF중심으로 분야별(감사, 인사, 법무, 조직 등) 적극행정 추진과제 기 발굴
  - \*\* (도전과제) 실국별 소관업무에 대한 도민체감형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설정
- (발굴대상) 전 부서 및 소속 지방공기업\*(전북개발공사)
  - 1부서 1과제 발굴, 실국별 중점과제 1~2건 선정
  - \* 행안부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20.1월)에 따라 공기업 포함
- (발굴분야) 민원 또는 갈등해결, 도민제안의 정책반영, 도민불편해소(편의제공)를 위한 절차개선, 규제애로 해소, 새로운 정책발굴·추진, 행정효율향상 등

## □ 추진방법

- (주요내용) 실국장 주도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대도민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설정 및 능동적인 적극행정 추진
  - (과제이행) 부서별로 1건이상 도전과제를 발굴하고 그중 실국별 중점과제(도전목표)를 설정하여 실국 자체 능동 추진
  - (성과관리) 부서별 과제는 실국 자체관리, 중점과제(실국별 1건)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시 통합 점검·관리
- (인센티브) 실국 중점 도전과제는 ‘20.하반기 우수공무원으로 추천

## □ 행정사항

- 실국별 부서 과제 발굴·관리 및 중점과제 선정·제출(~3.31)
  - \* 실국별 1건이상 제출, 도 공기업(전북개발공사)은 소관실국(건설국)에서 취합제출
- 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중점홍보로 도민체감 극대화(연중)

※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서식(붙임3)

## IV. 추진일정 및 금후 계획

### 1 과제별 추진일정

주요 내용	일 정	비 고
<b>1. 적극행정 추진기반 강화</b>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협조체계 강화		
-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TF 확대 운영(6개부서→9개부서) ※ '19. 9월구성	2.13 ~	대도약기획단
- 시군 및 지방공기업 협조체계 강화(체계완비, 책임관회의 정례화)	6, 11월	대도약기획단, 예산과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계획심의, 우수공무원 선발)	3, 6, 12월	대도약기획단
-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계획수립)	3월	예산과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전 직원 대상 전파)	3월	대도약기획단
- 과제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점검	6, 9, 12월	대도약기획단
○ 적극행정 상시교육체계 구축		
- 신규자·승진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에 반영	계속	인재개발원
- 적극행정 관련 맞춤과정 및 사이버과정 운영	계속	인재개발원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연 1회 이상)	5, 9월	대도약기획단
○ 적극행정관련 분야별 심화 전문교육 실시( 법제처 방문사례교육)	계속	법무행정과
○ 적극행정 창구운영		
- 민원 편람 재정비 및 민원후견인 비상연락망 구축	3월	자치행정과
- 원스톱 민원창구 및 민원후견인제 역할·체계 강화	계속	자치행정과
<b>2.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b>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정	6, 12월	대도약기획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	6, 12월	총무과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포상휴가 신설)	'20.상반기	총무과
- (소방)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상 우대방안 마련 및 인센티브 부여	6, 12월	소방행정과

주요 내용	일 정	비 고
<b>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b>		
○ 하급자 정책결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위임전결규정' 관리 * 사무전결규칙 개정은 행안부 규정 개정 이후 후속		정책기획관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속	관련규정 정비
- 적극행정 현장 상담창구 운영	계속	감사관
- 전라북도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7월	감사관
-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개정	4월	감사관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소송지원, 법률전문가 등 조력 지원)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계속	법무행정과
- 법률자문 등 법률적 지원	계속	법무행정과
- 배상책임 지원(행정종합배상공제)	계속	총무과
- 법령해석, 법령유권사례 제공(DB 연계 등)	3월~	법무행정과
<b>4. 소극행정 혁파</b>		
○ 소극행정 예방 및 엄정조치		
- 소극행정 현장 점검	수시	감사관
- 온·오프라인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계속	감사관
○ 소극행정 피해 구제제도 마련		
- 행정서비스현장 개정	7월	자치행정과
-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계속	자치행정과(전부서)
<b>5. 규제애로 해소 및 사례 확산</b>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분기	법무행정과
-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하여 적극행정 걸림돌 개선	계속	법무행정과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확산 및 홍보채널 다양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6월	대도약기획단
- 적극행정 홍보채널 다양화 및 적극 홍보	계속	대도약기획단
-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추진(시군 확산)	4월~	대도약기획단
<b>6. 도민체감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추진</b>		
○ 실국별 적극행정 도전과제 발굴 및 추진	4월~	전실국

## 2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 □ 과제별 추진상황 점검 추진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점검주기) 분기 1회 \* 5월, 8월, 11월
- (점검대상) '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분야별 적극행정 촉진과제 및 실국별 대도민 적극행정 도전과제
- (점검방법)
  - (촉진과제) 적극행정 활성화 실무TF 회의 개최를 통한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보완사항 개선 추진
  - (도전과제) 실국장 주도로 능동적인 과제이행 및 성과관리하되, 중점과제(실국별 1건)에 대해서는 분기별 실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시 통합 점검·관리

### □ 시군 및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관리 (소관부서 : 대도약기획단)

- 시군 및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시기) '20. 3월
  - (대상) 14개 시군 및 도내 지방공기업 3개 기관
- 시군 및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상황 점검
  - (시기) '20. 4월, 하반기 \* 반기1회 이상 책임관회의 활용
  - (대상) 14개 시군 및 전북개발공사
  - (내용) 시군 -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전북개발공사 - 전담 부서 및 책임관 지정 등

## 3 금후계획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제출(행정안전부) : '20. 3. 31.한
- 실행계획 전 직원 대상 전파 및 교육·홍보 : '20. 4월~
-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과제 이행 및 실적관리 : 연중

부서	역할 및 담당사무	비 고
대도약 기획단 (전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지원</li> <li>◦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관리</li> <li>◦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li>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반기별 자체 선발)</li> <li>◦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직장교육 연 1회 이상)</li> <li>◦ 적극행정 공직문화 정착·확산(우수사례 홍보 등)</li> </ul>	규정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운영지침
감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컨설팅 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li> <li>◦ 소극행정 엄정 조치(단속 및 처벌강화)</li> <li>◦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주기점검, 신고센터, 교육홍보 등)</li> </ul>	규정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정책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급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li> <li>- ‘위임전결’ 규정 시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고려</li> </ul>	규정 제4조
법무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법제지원(자차법규 입안 정비, 법제가이드라인 및 사례 안내 등)</li> <li>◦ 적극행정 법률적 지원(적극행정 보호제도 운영, 소송지원 등)</li> <li>◦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실적 발굴·관리</li> </ul>	규정 제9조, 제17조 및 운영지침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 상 인센티브 부여(의무화)</li> <li>◦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 징계 관련 사항</li> <li>- 징계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징계면책 도입 등</li> <li>◦ 적극행정 법률적 지원(배상책임지원 등)</li> </ul>	규정 제14조, 제16조, 제17조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상시교육체계 구축)</li> <li>- 신규자, 승진자 교육과정에 ‘적극행정’ 교과목 반영</li> <li>- 자체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강사풀 육성</li> <li>- 상시학습시간 인정시간 확대, 법제분야 교육훈련과정 포함</li> </ul>	규정 제8조 및 운영지침
예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지원</li> </ul>	행안부 확산방안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원스톱 민원창구,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 민원후견인제 등 운영</li> </ul>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소방공무원)</li> </ul>	규정 제14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운영지침('19.6월), 평가지표 등

구분	전담부서	조례 제정	지원위원회 구성
<b>합계</b>		<b>완료 14</b>	<b>완료 5, 대체 4, 진행 5</b>
전주	기획예산과	제정·공포 완료('19.12.20.)	지원위원회 구성 중
군산	기획예산과	제정·공포 완료('19.11.15.)	지원위원회 구성 중
익산	행정지원과	제정·공포 완료('20.2.7.)	인사위원회 대체('20.2.7.)
정읍	기획예산실	제정·공포 완료('19.12.19.)	인사위원회 대체('19.12.19.)
남원	기획실	제정·공포 완료('19.12.11.)	지원위원회 구성 중
김제	기획감사실	제정·공포 완료('19.11.20.)	지원위원회 구성 완료('19.12.19.)
완주	기획감사실	제정·공포 완료('20.2.27.)	지원위원회 구성 중
진안	기획감사실	제정·공포 완료('19.12.31.)	지원위원회 구성 완료('20.2.26.)
무주	기획실	제정·공포 완료('19.12.16.)	지원위원회 구성 중
장수	기획조정실	제정·공포 완료('20.1.13.)	지원위원회 구성 완료('20.2.28.)
임실	기획예산실	제정·공포 완료('19.12.31.)	인사위원회 대체('19.12.31.)
순창	기획예산실	제정·공포 완료('19.12.20.)	지원위원회 구성 완료('20.3.3.)
고창	기획예산담당관	제정·공포 완료('19.12.30.)	인사위원회 대체('19.12.30.)
부안	기획감사담당관	제정·공포 완료('20.1.30.)	지원위원회 구성 완료('20.2.14.)

## 적극행정 도전과제 [실국명 / 기관명]

과 제 명	(예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		
발굴분야	(예시) 갈등해결, 규제애로해소 ....	적극행정유형	(예시)1-④ 적극적 이해조정
담당부서	000과장 홍길동(☎280-0000) / 000팀장 이길동(☎280-1234) / 담당자 삼길동(☎280-4567)		

※ 과제명은 구체적 내용(사례)이 드러나게 작성

(예) ○○과의 적극행정 성과(×), 장기임대용지 임대료율 완화를 통한 새만금산업단지 투자유치(○)

### 1 현황 및 문제점

- 휴먼명조, 15p ※ 관행, 규정절차 등의 문제점, 실무상 어려움 등
- 

### 2 개선방안

- 
- 

### 3 추진계획(내용)

- ※ 선택한 적극행정 유형의 성격이 부각될 수 있도록 작성
- 

### 4 기대효과

- ※ 추진 이전과 이후의 모습 대비
- 

#### <적극행정 유형 >

##### ■ (유형 1) 행태적 측면

- ①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②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③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 하는 행위
- ④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유형 2)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①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②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③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1

## 적극행정

□ **적극행정의 정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적극행정 판단기준**

- 적극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함

①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목적과 처리 방법이 국민편익 증진, 국민불편 해소, 경제 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의미
-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이권개입, 알선·청탁, 금품·향응 수수 등의 행위가 연관된 경우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

②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는 특성을 의미
- ‘전문성’은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창의성이 참신한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돕는다면, 전문성은 그러한 해결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주게 됨

③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의

의미도 함께 담고 있음

※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인 정책을 기획·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 행위의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업무를 추진할 당시를 기준으로 가용할 수 있었던 자원과 정보, 업무량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노력이나 주의의무 정도를 판단

#### ④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적극행정에 해당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 적극행정 유형(예시)

#### ○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 소극행정의 정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소극행정 유형 및 판단기준(예시)

분 류	정의 및 판단기준
적당 편의	<p>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 &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li> <li>·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li> <li>· 기타 사후 조치나 소관·연관된 업무 등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태</li> </ul>
업무 태만	<p>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p> <p>◆ 판단기준 &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느장 대응 등의 행태</li> <li>·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li> <li>· 기타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li> </ul>
탁상 행정	<p>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p> <p>◆ 판단기준 &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종전 지침이나 현재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전임자의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li> <li>·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li> <li>· 기타 업무처리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기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li> </ul>
기타 관중심 행정	<p>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p> <p>◆ 판단기준 &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권위적인 자세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행태</li> <li>· 업무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국민(민원인 등)에게 떠맡기거나,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국민(민원인 등)이 대신 준비하거나 처리하게 하는 것</li> <li>· 규정·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li> <li>· 기타 자의적인 업무처리로 국민이나 민원인에게 피해를 주는 업무행태</li> </ul>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18호, 2019. 8. 6, 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의견 제시 요청)**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기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안이 중대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해당 시·군·구가 소속된 시·도의 감사기구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의 경우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소관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또는 감사원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적극행정 관련 교육)**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업무 여건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 또는 환경의 변화로 개선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에는 적극

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취지를 벗어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지원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 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른 행정부시장·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군·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퇴직 예정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사상 우대 조치를 이행했는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었을 것
- ④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사전컨설팅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공무원이 제12조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4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발생한 비위임을 주장할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징계등 의결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을 가진 사람(이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협의자에게 보내는 경우로서 징계의결등의 대상 행위가 적극적인 규제 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 ombuds만이 징계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징계등 협의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소극행정 예방 지원)**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극 행정 예방 및 근절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제30018호, 2019.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9-11-11 조례 제4699호

##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대도약기획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라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나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지사를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간사)**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8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9-11-11 조례 제4703호

##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전라북도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 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호사 계약서 사본
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도지사는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송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반환)**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비용 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전라북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2.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신청서(제3조 관련)									
신청인	담당자	직 급 :			성 명 :				
	담당업무								
사 건 번 호		검 찰 청		경 찰 서		고소·고발		민사(기타)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접수일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지 원 금 액		금                      원		지 원 일 시					
사 건 개 요									
구비서류		<input type="checkbox"/>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 <input type="checkbox"/>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input type="checkbox"/> 변호사 위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그 밖의 서류							
<p>「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 □ □    (인)</p> <p>전라북도지사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 소송비용 관리대장(제4조제3항 관련)

연번	부서명	지원대상자	사 건 개 요	지원결정일	지원금액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	확정일	결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 소 송 결 과 보 고(제5조 관련)

○ ○ 실 과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대 책			
첨 부	판결문사본, 판결확정증명원, 소송비용회수상황		

※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둔다.



##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2. 도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
  3.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4.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5. 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직근로자(청원경찰 포함)와 기간제근로자
- ② 제1항제2호·제3호의 대상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4호의 대상자 중 그 소속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민사소송은 「전라북도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이내
2. 다수 관련사건: 500만원 이내
3. 도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건: 700만원 이내

**제4조(비용 반환)** ①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

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03-06 훈령 제 1520호  
(일부개정) 2014-03-21 훈령 제 1639호  
(일부개정) 2019-08-09 훈령 제 1747호

## 전라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소관부서 : 감사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극행정면책의 구체적인 운영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전라북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개정 2014. 3. 21, 2019. 8. 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9. 8. 9>
2. “면책”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상의 징계, 경고, 훈계 등의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4. 3. 21, 2019. 8. 9>

4. “경고 등 처분”이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전라북도의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 및 기관경고·훈계(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9. 8. 9>

##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면책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면책은 전라북도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8. 9>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 8. 9>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9. 8. 9>

1.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제6조(면책대상 제외)**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 <개정 2014. 3. 21>
2. 음주운전 및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을 한 경우 <신설 2014. 3. 21>
3.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개정 2014. 3. 21>
4.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4. 3. 21>
5.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개정 2014. 3. 21>
6.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4. 3. 21>

**제7조(면책심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변호사 1인, 회계사 1인, 교수 1인 및 심의안전 관련부서장(과장급)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감사총괄팀 소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감사반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반 소속 공무원 중 감사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8. 9>

**제8조(면책제도 안내)**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가 끝났을 때에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개정 2019. 8. 9>

**제9조(면책심사 신청)**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결과 감사대상자에 대하여 면책조치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③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공무원 등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8. 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감사결과 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1, 2019. 8. 9>

**제10조(면책심사 처리)**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1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2조(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제13조(유의사항)** 이 규정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써,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장 공무원 경고 등 처분

**제14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상은 전라북도의 감사 또는 조사를 받는 기관 및 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 8. 9>

② 경고는 기관장에게, 훈계는 기관장 이외의 모든 공무원 등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하며,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개정 2019. 8. 9>

**제15조(경고 등 처분의 효력)** ① 기관장 경고 또는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으로 지정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방행정 역점시책 추진실적 평가시 기관장 또는 그 기관이 경고 받은 횟수를 반영하여 재정지원 또는 포상 등 기타 수혜적 조치를 함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6조(경고 등 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반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을 때
4.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관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5.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6. 징계책임이 없는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7. 기관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공무원 또는 그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17조(경고 등 처분권자)** 제14조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도지사가 행한다. 단, 훈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 임용권 등으로 인하여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유를 입증할만한 내용과 사실을 적시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고 등 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처분대상자 또는 처분기관에 별지 제6호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 8. 9>

**제19조(기록유지)** ① 경고 등 처분을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9>

② 제1항의 경고 등 처분대장은 인사담당부서에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 8. 9 훈령1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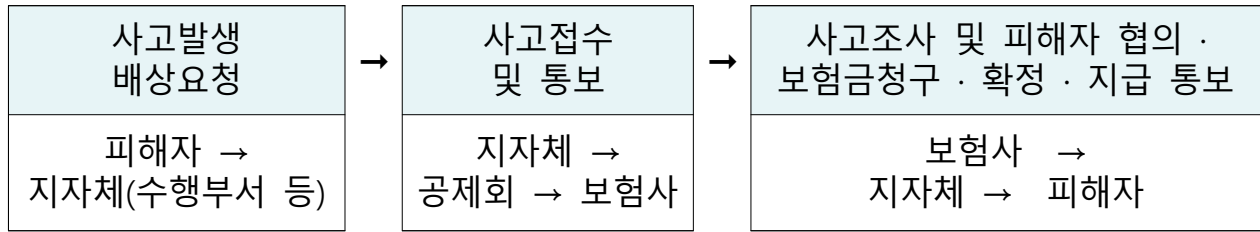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당시 감사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인 감사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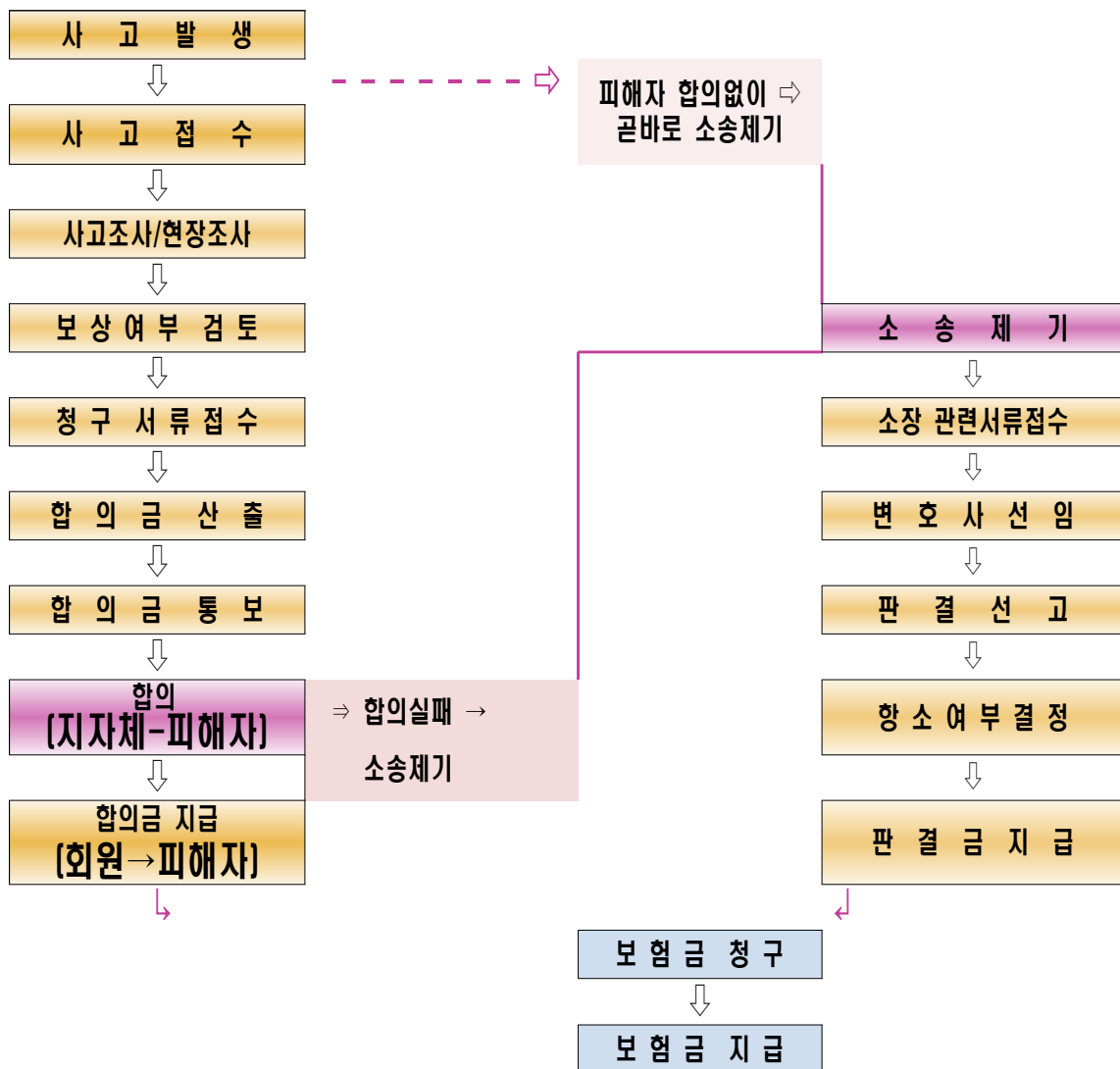
## 참고6

##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절차 흐름도(행정종합배상공제)

○ 사고발생 시 배상결정 및 보험금 지급 처리절차



○ 배상책임 사고 처리과정



- ※ 1. 피해자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보상  
 2. 보험사는 보상한도액 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금 지급  
 3.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판결금액 전액 보상



## 참고7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양식

수신자 ○○○ 귀하

제목 ○○○○ 신청 불허가 알림

1. (인사말)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답변 요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민원명, 접수번호)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불허가(불가, 불가처리, 불채택 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내용 :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의 내용
- 처분결과 : 불허가
- 검토내용

검토부서/ 담당자	검토내용
건축과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li> <li>•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li> </ul>
농업축산과 ○○○ (연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적근거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해당조항, 조문을 상세하게 적시)</li> <li>• 검토내용 : (불허가 등의 원인이 되는 사실, 현황 등을 적시)</li> </ul>

3. (구제절차 고지)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마무리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과(○○팀, 전화번호)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참고8

# 2019년 전라북도 적극행정 추진과제 점검결과(총괄)

핵심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및 계획	점검 결과	소관 부서
I-1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①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점검·관리	○ 실행계획 수립 완료(7.31.) ○ 이행실적 점검(9월,12월)	완료	대도약 기획단
I-2 기관장 책임강화 및 적극행정 선도	①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한 위임전결규정 개정	○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추진계획('19.7.15) ○ 전라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 개정규칙 공포·시행('19.10.18)	완료	정 책 기획관
	② 적극행정지원 의사결정 체계지원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11.19.) - 적극행정 관련 추진사항 심의의결	완료	대도약 기획단
II-1 사전컨설팅제도 보완·확대	① 사전컨설팅 운영체계 신속정비	○ 사전 컨설팅감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서 협의 ※ 감사관실 자체 전담팀 구성·운영 중	추진중	감사관
	② 소관부처 판단 자연 시·군·자치단체 사전컨설팅 신청자격 부여	○ 「전라북도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반영 추진 ※ 규정 개정('20.상반기)		
	③ 인허가 관련 사전컨설팅 요청은 원칙적 반려제한 결과통보 의무화			
II-2 감사·징계 관련 제도보완	① 자체감사 면책 신청기한 제한 폐지	○ 규정 개정 완료('19.8.9.) ○ 감사대상기관 안내 등 시행 중	완료	감사관
	②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권고· 의견표명(권익위) 조치시 감사 면책	○ 감사면책 시행 중 ※ 규정 개정('20.4월)	추진중	감사관
	③ 내부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체	○ 내부운영규정 감사활용 자체 추진 중	완료	감사관
	④ 적극행정 추진중 경미한 절차상 하지는 감사·징계 면책	○ 감사·징계면책 시행 중 (현장면책심의회 운영)	완료	감사관
	⑤ 사전컨설팅 결과에 대한 징계면책 도입	○ 규정 반영 및 시행 중 ('17. 3월 ~ )	완료	감사관
	⑥ 징계의결시 적극행정 면책 해당여부 검토 의무화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 완료('19.8.6)	완료	총무과
	⑦ 징계요구 사실 고지시 징계면책 건의제도(중기옴부즈만) 안내	○ 징계면책 건의제도 안내 ( '19. 9월 ~ )	완료	감사관

핵심과제	세부과제	추진내용 및 계획	점검 결과	소관 부서
Ⅱ4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계	① 적극행정 공직자 징계·수사 시 법률전문가 등 지원	○ 전라북도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19.11.11) ※법률지원 강화적용('20.1월~)	추진중	법 무 행정과
Ⅱ44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① 「적극행정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 인사상 우대계획 수립 완료(8.16) ○ 근무성적평정규정 개정('19.12.27) ※복무조례 개정 추진중	추진중	총무과
Ⅲ1 사례중심 현장교육 소통강화	① 각 기관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모범사례 발굴·확산	○ 홈페이지 코너 개설('19.8.) ○ 전광판 홍보영상('19.9~) 및 행정전화 통화연결음('19.10~) 송출 ○ 적극행정 4행시 백일장('19.9월)	완료	대도약 기획단
	② 사례중심의 교육, 홍보 실시	○ 실천다짐 및 특강('19.10.28) ○ 사례중심 직원교육('19.11.19) ○ 사이버강의(3과목) 개설 및 적극행정 교과목 반영	완료	대도약 기획단 인 재 개발원